

EU Brief

| EU 동향 |

• 유럽연합(EU)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의

The award of the Nobel Peace Prize could not have come at a better moment for the European Union.

• 동유럽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Prospects of the Eastern European market

• EU에서 부는 분리주의 바람

Rise of separatist sentiment in EU member states: Background and prospects

•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EU

The EU to impose anti-dumping tariffs on Chinese solar panels

• EU집행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제시

The EU commission announces a plan to foster its manufacturing industry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유럽연합(EU)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	002
The award of the Nobel Peace Prize could not have come at a better moment for the European Union.	



EU Economy

동유럽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004
Prospects of the Eastern European market	



EU Politics

EU에서 부는 분리주의 바람	008
Rise of separatist sentiment in EU member states: Background and prospects	



Trade & Investment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EU	015
The EU to impose anti-dumping tariffs on Chinese solar panels	



Industry Trends

EU집행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제시	019
The EU commission announces a plan to foster its manufacturing industry	



EU Law

EU의 근로관계법 체계	023
Labour related laws in the EU	



Social Issues

하나의 유럽: 유럽 공동정체성과 문화다양성	028
One Europe: common European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Report Review

유럽개혁센터(CER)가 제시하는 경제회복 해법	032
Economic recovery requires a better deal for labour	



EU Centre news

제4회 EU Week	034
The 4th EU Week	
제16회 브뤼셀 포럼	035
The 16th Brussels Forum	
온라인 원격 강의	036
Online Remote Lecture	



유럽연합(EU)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의

The award of the Nobel Peace Prize could not have come at a better moment for the European Union.

As Europeans ponder over the next steps of economic integration it has been easy to lose sight of the fact that we remain at our core, if you will permit me to say, the best mode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most successful peace project in human history.

It is too easy to forget that within living memory, Europeans found themselves compelled to engage in the slaughter of other Europeans. Less than 25 years ago, half of the continent was under the communist yoke, deprived of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Today, th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has ensured that a continent that had consumed itself in war for centuries has become a continent unified in peace and democratic values. Former enemies such as France-Germany-Poland have achieved true reconciliation. Democracy has been cemented into former authoritarian regimes.

Moreover, the European Union acts as a beacon and a force for peace around the world. The prospect of accession to the Union is the undercurrent driving 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Balkans. Our assistance to the democratization that has followed the Arab Spring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ommon values. The EU uses all its foreign policy tools to improve peace and security in regions around the world from the Horn of Africa to Aceh. The EU is the largest provider of development assistance and humanitarian aid. It is at the forefront of global efforts to fight climate change and promote global public goods.

The EU and Korea share the values on which European integration has been built - respect for

human dignity, freedom, democracy, equality,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ey underpin the EU-Korea Strategic Partnership that will facilitate cooperation on dealing with the key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e audacity of the EU's founding fathers, the relentless work carried out over generations to bring our countries and citizens together must give us the confidence to tackle the key challenges of the future whether this be the next stages in European integration or dealing with climate change.

It is my hope that the award of the Nobel Peace Prize will not only give European leaders and citizens the confidence to go forward with their project. I hope that it will also inspire East Asians to build structures that will eradicate for ever the threat of conflict in this region and equip us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together. ★

Tomasz Kozlowski, EU ambassador, Head of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유럽이 경제통합의 다음 단계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유럽통합의 핵심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평화 프로젝트(Peace Project)이자 국제관계의 모범으로 평가 받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유럽 대륙의 절반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빼앗긴 채 공산주의 정권 아래 존재하였고, 유럽 내에서 자행되었던 학살의 기억이 많은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

오늘날 EU는 유럽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수세기 동안 소모적인 전쟁을 치러온 유럽이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 아래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과거에는 적이었던 프랑스, 독일, 그리고 폴란드가 진실한 화해의 길로 들어섰고, 민주주의는 이전의 독재주의 체제를 덮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또한 EU는 평화의 햇불 역할을 자처하며 전 세계의 평화 유지에 힘쓰고 있다. 발칸반도는 EU 가입을 위해 안정과 번영을 촉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공통된 가치의 발전에 기반하여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민주화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을 보내고 있다. EU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부터 아체(Aceh)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차원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EU는 개발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최대 공여자이며 기후변화 및 국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유럽통합의 근본가치인 인간존엄성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및 인권존중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가치들은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지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는 21

세기 도전과제에 맞설 수 있도록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EU 창립자들의 대담함,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 유럽국가와 시민들이 함께 이룩한 화합은 기후변화부터 보다 심화된 유럽통합까지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유럽의 지도자들과 시민이 유럽통합 프로젝트와 함께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EU의 경험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역 내 분쟁을 영원히 근절하고, 함께 다가올 미래의 도전을 준비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토마쉬 코즈로프스키 주한 EU대표부 대사





동유럽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¹

Prospects of the Eastern European market

Three main issues of Eastern European market are as follows: first, whilst there are chances of financial uncertainty in certain countries, overall stability is expected to continue with the Vienna Initiative still intact; second, the prospect for Eastern Europe to remain as a valuable production base for the EU looks strong since the effort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gain the EU membership are taking place concurrently; and third, despite having poor growth in comparison with other emerging economies, the prospect for a niche market concerning the middle class and the ageing population looks promising. These trends will vary according to regions: Central and Eastern Europe;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who are members of the EU; and those who are non-members.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firms targeting Eastern Europe to acknowledge that it is not a single but 'regionally differentiated' market that requires separate strategies. Also those firms who have already entered the market will have to brace themselves for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to secure better production bases.

비관론과 회복론이 교차하는 동유럽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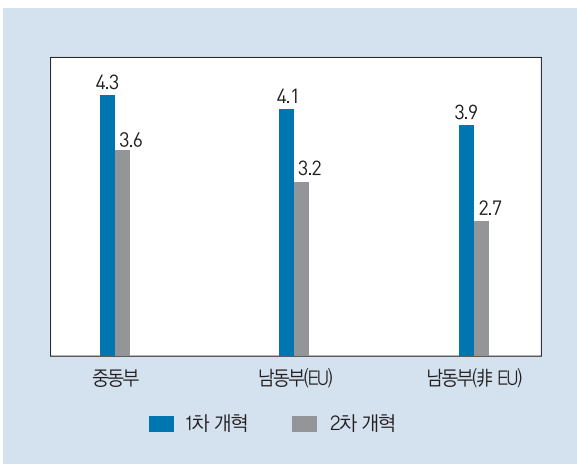
동유럽 국가²에서 시장개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지난 20년 동안 동유럽 경제는 시장개혁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면서 유망한 신흥시장으로서, 그리고 2004년 대거 EU에 가입한 이래 서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2009년 초 연쇄 부도설을 겪고 나서는 금융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소비시장과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관론과 회복론이 엇갈리는 동유럽 시장을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할지 평가하고자 한다.

시장개혁과 경제안정 측면에서 중동부 유럽의 성과가 탁월

동유럽 국가들은 개혁 초기 극심한 불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면서 성장이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되었다.³ 지역별로는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8개국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어 모두 EU 회원국이 되었다. 남동부 EU 회원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2013년 가입 예정)는 기본적인 시장개혁은 완성했지만, 사회주

★ 지수로 본 시장개혁의 성과 비교



주: 8개 분야에 대해 개혁 및 개선의 정도를 평가하여 1부터 4.3까지의 지수를 부여. 지수 1은 개혁 정도가 미미한 상태를 의미하며, 4.3은 개혁이 완성된 상태를 나타냄
자료: EBRD, Transition Indicators.

의 요소가 남아 있어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은 미흡했다. 남동부의 비EU 회원국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구 유고연방 국가들은 극심한 내전을 겪어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동유럽 시장의 3대 이슈

지난 20년간 동유럽은 한국기업의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기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對동유럽 수출과 수입은 빠르게 증가했는데, 한국의 對동유럽 수출은 1990년 2억 달러에서 2011년 13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동유럽으로부터의 수입도 2001년 3억 달러에서 2011년 24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평판디스플레이(25.6%), 자동차부품(18.5%), 자동차(8.5%)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부품(12.7%), 원동기 및 펌프(9.4%), 곡식류(9.0%)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한국의 對EU 수출에서 동유럽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7%에서 2011년 25.0%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동유럽은 한국의 對EU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2008~2012년 평균 수출증가율은 對서유럽이 -5.7%에 그친데 반해 對동유럽 수출은 매년 4.4% 증가했다.

최근 동유럽 시장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슈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① 금융위기 가능성: '동유럽 금융불안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먼저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동유럽 금융불안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09년 2월 동유럽 국가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몰고 갔었기 때문에 금융불안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동유럽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적으로 '비엔나 이니셔티브'⁴ 덕분이다. 비엔나 이니셔티브는 서유럽 은행과 국제기구들이 동유럽 금융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자금을 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최근 일부 동유럽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EU집행위가 주도해 '비엔나 이니셔티브 2.0'을 발표했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체코 등의 CDS 프리미엄은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훨씬 낮으며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부충격 면에서는 헝가리와 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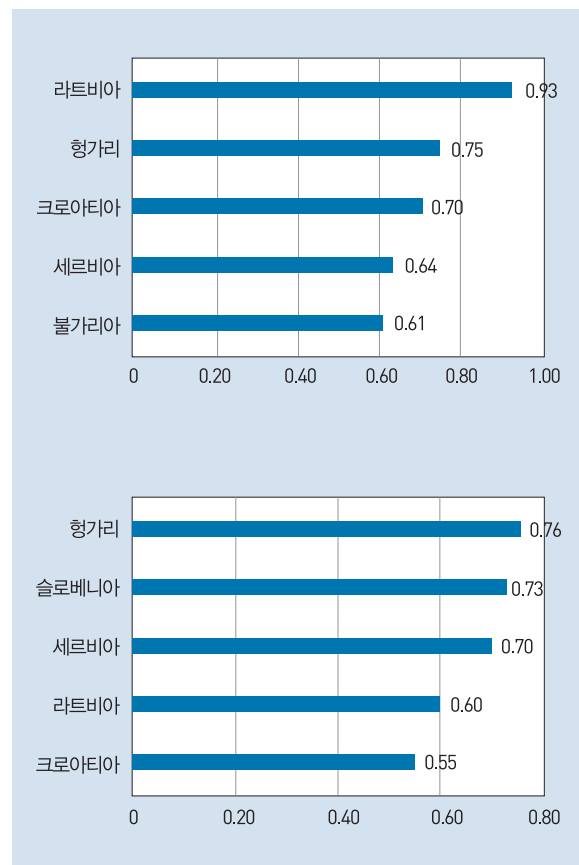
⁴ 2009년 동유럽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유럽 은행들은 동유럽 국가의 대출을 차환해주고 국제기구는 동유럽 국가들에 경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

★ 최근 CDS 프리미엄 및 국가 신용등급

구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체코
CDS				
2009년 3월	90.9	142.1	385.8	306.7
2012년 11월	90.1	356.9	86.8	76.4
S&P 등급				
등급	AA+	BBB-	A-	AA-
전망	부정적	부정적	안정적	안정적

주: CDS 프리미엄은 만기 5년물 기준(bps)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S&P

★ 지수로 본 시장개혁의 성과 비교



주: 8개 분야에 대해 개혁 및 개선의 정도를 평가하여 1부터 4.3까지의 지수를 부여. 지수 1은 개혁 정도가 미미한 상태를 의미하며, 4.3은 개혁이 완성된 상태를 나타냄
자료: EBRD, Transition Indicators.

비아가, 내부불안 측면에서는 헝가리와 슬로베니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⁵는 정부부채가 높은 가

⁵ 헝가리: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123.5%), 정부부채 비중(80.4%), 외화표시 대출 비중(55.4%)

¹ 본고는 삼성경제연구소의 『CEO Information』 '동유럽 시장의 3대 이슈'를 토대로 작성 (2012년 11월 28일)

² 동유럽 경제는 터키와 러시아/CIS 국가들을 포함할 경우 30개국으로 분류되나, 본고에서는 유럽 구사회주의 16개국으로 범위를 한정 (인구 1.2억 명, 1인당 GDP 평균 17,132달러)

³ 자세한 내용은 『EU 브리프』 제4권 5호의 '동유럽 경제의 명(明)과 암(暗)' 참조



운데 대외채무 비율과 외화표시대출 비중이 동시에 높고, 슬로베니아⁶는 부동산 대출로 인해 은행권 전반에 부실 자산이 급증하여 금융불안 요인이 내재해 있다.

② 생산거점 적합도: '동유럽은 여전히 서유럽 시장의 교두보인가?'

두 번째 이슈는 '동유럽이 서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對EU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을 찾고 있다면 동유럽은 여전히 가치 있는 생산기지다. 지난 20년간 동유럽은 부품 및 중간재를 서유럽에 수출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생산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다. 향후에도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의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사활을 걸고 지속적으로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비용이 동유럽 국가 간에 편차가 크다 해도 평균적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같은 남유럽에 비해 훨씬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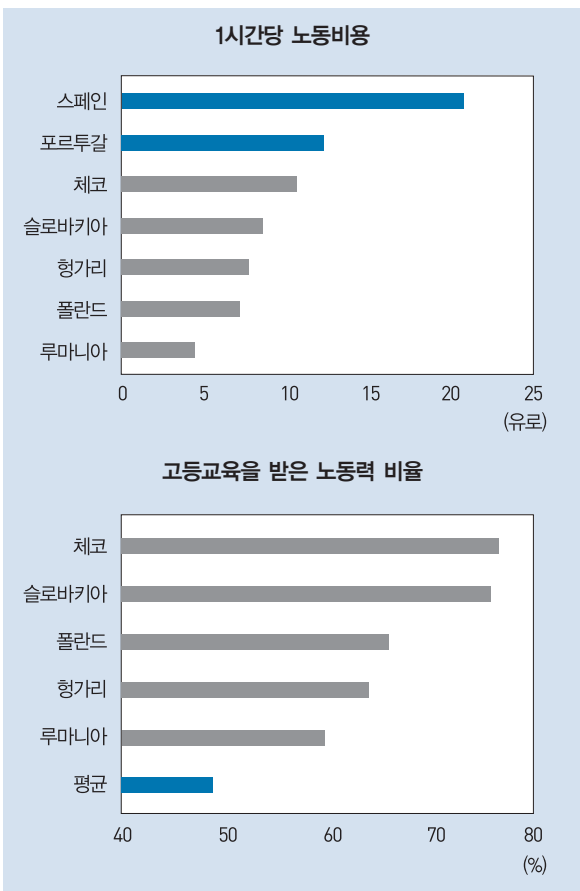
생산거점 적합도는 지역별로 다른 특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은 인프라 수준과 양질의 노동력이 큰 장점이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2013년 가입 예정) 등 EU에 속한 남동부 국가들은 EU 회원국이면서도 노동비용이 낮아 생산거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EU에 가입하지 못한 구 유고연방 출신의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극심한 내전으로 인해 아직 시장 경제체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라 투자환경 개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③ 소비시장 매력도: '소비시장으로서 동유럽의 매력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슈는 '소비시장으로서 동유럽의 매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동유럽 소비시장은 GDP 규모로 이미 인도, 러시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산층과 고령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11년 기준으로 동유럽의 소비지출 규모는 9,060억 달러, 인도 1조 65억 달러, 러시아 9,100억 달러다.⁷

⁶ 슬로베니아: 예대율(152.4%), 무수익여신 비중(17.0%)

★ 동유럽 국가의 노동력 비용과 노동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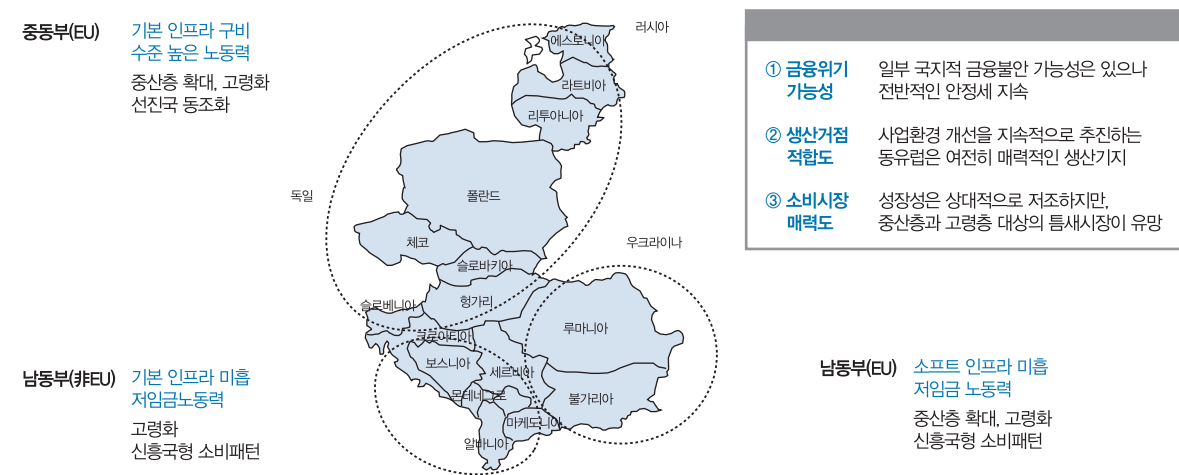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WB, WDI

다만 체제전환 기간 동안 무상 의료부문 약화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서유럽으로의 이민 급증, 서유럽 문화 모방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산 등이 겹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동유럽 시장의 성장성은 다른 주요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산층과 고령층 대상의 틈새시장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의 시장 매력도 역시 지역별로 다른 특색을 나타내는데, 중산층이 확대되며 선진국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중동부 유럽에서는 보험, 여가 및 오락 관련 지출이, 신흥국형 소비패턴을 보이는 남동부 유럽은 통신 기기와 통신서비스 관련 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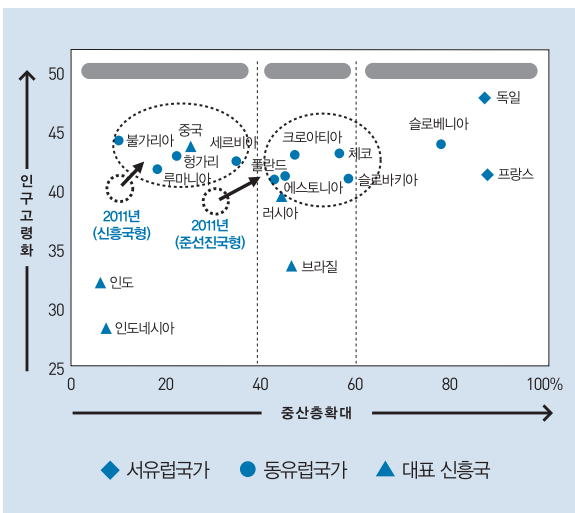
⁷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까지 동유럽의 소비지출 규모는 연평균 4.8% 증가

★ 2020년 동유럽과 주요국의 소득계층 및 인구 특성



주: X축은 연간 처분가능소득(2011년 가격)이 25,000달러 이상인 가구 비중이고, Y축은 중위연령
자료: Euromonitor DB를 토대로 작성

★ 2020년 동유럽과 주요국의 소득계층 및 인구 특성



주: X축은 연간 처분가능소득(2011년 가격)이 25,000달러 이상인 가구 비중이고, Y축은 중위연령
자료: Euromonitor DB를 토대로 작성

종합평가 및 시사점

동유럽 시장의 3대 이슈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국지적 금융불안의 가능성은 있으나 비엔나 이니셔티브가 지속되는 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다. 둘째, 사업환경 개선 노력과 EU 가입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은 여전히

EU 진출을 위한 유용한 생산기지로 남을 전망이다. 셋째, 성장성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저조하지만 중산층과 고령층 대상의 틈새시장은 유망해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동부 유럽, EU에 속한 남동부 유럽, EU에 속하지 못한 남동부 유럽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동유럽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동유럽을 '하나'의 시장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향후 동유럽 내 유리한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경쟁격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동유럽과의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이 사용했던 서유럽 우회공략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⁸ 만약 한국기업들이 동유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력시장인 서유럽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 집중 지역의 임금 상승, 고급인력 확보 차질 등 경영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동유럽 시장에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시점이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⁸ 중국 창청자동차는 불가리아에 중국 최초로 동유럽 내 합작공장 설립했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10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



EU에서 부는 분리주의 바람

Rise of separatist sentiment in EU member states: Background and prospects

There is a rise of separatist sentiment across Europe. This is most apparent in Belgium, the United Kingdom and Spain where Flanders, Scotland and Catalonia, respectively, are trying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ir autonomy. This phenomenon has its roots in historical background, but it started to intensify as the Eurozone fiscal crisis began to cause hardship even in economically strong regions. It is not likely that current events will lead to full-fledged independence and creation of new states but rather central governments will try to make a deal which will involve giving some form of autonomy to regional governments. It will be difficult for central governments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satisfying regional governments and persuading investors to believe that the fiscal consolidation plans are credible. Also, the EU will be required by regional governments to clarify its position on how it would deal with new states when the independence of regional governments does materialise.

분리주의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증폭

EU는 재정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화폐통합을 넘어 재정통합으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재정통합에 도달하는 때까지는 상당한 잡음과 마찰이 예상되나 방향은 이미 결정된 듯하다. 재정위기가 1~2년 내에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EU 27개국, 더욱 구체적으로 유로존 17개국은 점진적으로 통합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지방정부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스페인의 카탈루냐,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대표적인 예다. 분리주의 움직임은 국가 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데, 국가별로 불안 수준이 크게 다르지만 지방정부의 독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EU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어떨까?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기국들이 그리스의 선례를 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 더욱 큰 걱정거리다. 현재 지방정부의 분리주의 요구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립을 외치는 지방정부들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결정할 국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반면, 벨기에와 스페인

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리주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EU 회원국에게 스코틀랜드가 롤 모델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 국가에서 분리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경우 경제적 위상이 플랑드르와 카탈루냐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플랑드르와 카탈루냐는 중앙정부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그러하지 못하다. 플랑드르는 벨기에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카탈루냐의 1인당 소득은 스페인의 평균보다 약 20%가 높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영국 GDP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1인당 소득은 영국 평균 수준과 비슷하다. 따라서 “돈 문제”가 걸린 플랑드르와 카탈루냐 국민은 거리에 나와 경제적 분리를 외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스코틀랜드 국민은 다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플랑드르와 카탈루냐의 상황은 재정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을 꺼려하는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연상시킨다.

권력 이양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플랑드르

현재 벨기에는 연방제 국가이며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의 3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1815년에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왕이 된 빌렘 1세는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었다. 이로 인해 프랑

★ 플랑드르와 벨기에의 주요 지표

구분	2009년 GDP 비중(%)	2009년 1인당 GDP	2010년 인구 (백만명)	2011년 실업률 (%)
플랑드르	76	99,3	630	4,3
벨기에	100	100	1,100	7,1

자료: FT, NYT 등 주요 언론 보도

스어를 사용하는 귀족들과 노동자들이 분노하였고 결국 1830년 벨기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혁명이 일어나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였다. 벨기에 정부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며 수도인 브뤼셀에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모든 공공기관 및 군대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였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쪽의 왈로니아 사람들과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쪽의 플랑드르 사람들 간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도 19세기에 왈로니아 지역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플랑드르 지역은 뒤처지기 시작했다.

당시 벨기에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플레미시운동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어와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조직들을 구성했고, 1861년에는 최초의 플랑드르정당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플레미시운동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한 후 플랑드르의 네덜란드어 사용을 지지했으나 적과의 동침을 택한 세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레미시운동은 플랑드르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1960년대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벨기에 정부는 지역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단행했다. 1962년에 브뤼셀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도시로 공식화되었고, 약 130년간 번역본으로만 존재했던 네덜란드어 헌법이 법률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플랑드르와 왈로니아의 관계는 점차 안정을 찾아나갔다.

1954년에 설립된 보수민족당은 민족주의를 주장하

며 1960년대에 세력을 굳혀나갔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보수민족당이 분리주의를 주장하기보다 연방제를 받아들이며 당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2001년에는 당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보수민족당은 보수 새 플랑드르연대(NVA)와 진보 스피릿당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 벨기에에서는 분리주의 움직임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30~40여 년간 두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플랑드르가 왈로니아로 이전해주는 재정규모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플랑드르에서 왈로니아로 이전되는 재정규모는 연 100억 유로 수준으로 플랑드르의 교육 예산보다 크다.¹ 이를 반영하듯 2010년 총선에서 주정부의 권력 확대를 주장하는 NVA가 플랑드르는 물론 벨기에 전체에서 가장 많은 27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권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NVA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며 벨기에는 세계 최장기인 541일 동안의 무정부 상태를 기록했다. NVA와 왈로니아에 기반을 둔 사회당(26석)간의 마찰이 지속되었고 결국 2011년 12월에 사회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2012년 10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NVA가 압승을 거뒀다. 플랑드르에서 28.5%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벨기에의 제2 도시인 앤트워프의 시장자리도 확보했다. NVA에 대한 지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권력 이양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분노하는 카탈루냐

최근 스페인 최대 경제인 카탈루냐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마찰이 스페인 경제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9월 11일 카탈루냐에서는 사

¹ De Wever, B. et al. (2011). Right-wing Flanders, left-wing Wallonia? Is this so? If so, why? And is it s problem? Re-Bel Initiative. Re-Bel e-book 12.





★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주요 지표

구분	2009년 GDP 비중(%)	2011년 1인당 GDP (스페인=100)	2011년 인구 (백만명)	실업률 (%)
카탈루냐	18	117.9	730	22.6
스페인	100	100	4,600	25

자료: FT, NYT 등 주요 언론 보도

상 최대 규모인 150만 명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했다. 이어 카탈루냐는 중앙정부에 재정 자주권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스페인이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카탈루냐가 스페인 경제의 18%,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갈망의 뿌리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동북부의 4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으로 고유 언어와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경기를 뜻하는 ‘엘 클라시코’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유는 두 팀이 스페인 최고인 점과 더불어 지역감정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와 수도인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한 카스티야 지역은 지난 수백 년간 양측 관계를 이어왔는데,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마찰의 원인은 같다. 카탈루냐는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에 내는 과도한 세금의 축소를 원해왔다.

1469년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야 왕국이 합병되어 통일국가가 생겨났고, 이후 1258년에 아라곤 왕국에 병합되었던 카탈루냐의 지위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카탈루냐가 두 차례의 반란에 실패하며 의회와 정치적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최근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9월 11일이 바로 1714년에 카탈루냐가 14개월 동안 버티다 스페인의 필립 5세에게 점령당한 날이다. 19세기 말부터는 카탈루냐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독립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에 힘입어

1930년대에 짧게나마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못가 1936년에 왕당파인 프랑코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1939년 공화파의 지지기반인 카탈루냐를 점령했다. 카탈루냐는 다시 자치권을 상실했고, 카탈루냐 언어의 공식 사용도 금지되었다. 또한 카탈루냐의 요버 수반(首班)과 함께 수천 명의 카탈루냐인들이 처형당했다. 이로 인해 카탈루냐 사람들 가슴 속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2000년대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카탈루냐의 분리주의 요구가 다시 등장했다. 1975년 프랑코장군이 사망하자 스페인에서는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1978년에 제정된 헌법은 스페인 내 다양한 민족과 지역(nationalities and regions)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후 17개의 자치지역이 생겨났다.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스페인어와 함께 카탈란어를 공용어로 다시 도입했고,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카탈루냐는 자치권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중앙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또한 카탈루냐는 산업 기반 구축, 유로존 가입 요건 충족 등에 기여하며 스페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보수파인 대중당이 중앙집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카탈루냐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요구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보수파는 카탈루냐가 국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고, 2004년과 2005년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자 스페인 전역에서는 카탈루냐산 스파클링 와인인 카바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세수권, 사법권, 이민제도 관할 등을 골자로 한 자치권 확대 법안이 카탈루냐 국민투표에서 74%의 지지율을 얻으며 통과되었다. 이에 대중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7월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외에는 국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카탈루냐어가 스페인어에 앞설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발표 다음날, 결과에 반대하는 100만여 명의 시위대가 카탈루냐의 독

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최근 카탈루냐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이전 규모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지난 7월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카탈루냐가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독립을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카탈루냐가 중앙정부로의 과도한 재정이전이 자금난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카탈루냐가 중앙정부와 여타 지방정부에 매년 GDP 대비 8.5%에 달하는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기준 170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로 카탈루냐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지원금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² 그리고 카탈루냐의 소득 수준은 17개 지역 중 4위였지만 재정 이전 후에는 9위로 하락했다. 더불어 카탈루냐는 선제적으로 재정긴축을 추진한 결과 2012년 상반기 GDP 대비 0.59%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방정부들의 평균은 GDP 대비 0.77%로 카탈루냐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재정 자치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카탈루냐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2012년 9월 카탈루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자치권 확대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자 카탈루냐의 마스 수반(首班)은 2012년 11월 2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말에는 카탈루냐 의회가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계획을 승인했는데 2012년 2/4분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탈루냐의 독립을 원한다.’는 응답이 51.1%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p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10월에 스페인 의회가 카탈루냐의 독

²The Catalan government and the four provincial councils give birth to Catalonia's tax administration. (2012. 9. 19.). Catalan News Agency.

립을 묻는 국민투표 승인안을 부결했으나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최고치에 달해 있는 만큼 이 사태가 상징적인 이벤트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총선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 같이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약 3분의 2에 달하는 득표율을 얻으며 승리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총 135석 중 과반 이상을 기대했었던 집권당, 즉 마스 수반의 카탈루냐통합당이 차지한 의석 수가 62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것이다. 카탈루냐 총선에서 나타난 집권당 회피 현상은 재정위기 발발 이후 저성장과 고실업률에 허덕이는 여러 유로존 국가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가장 선방한 정당 중 한 곳인 카탈루냐공화좌파당의 의석 수는 10석에서 21석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카탈루냐 통합당이 여전히 다수당이지만 앞으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통합당은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지만 당원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강도가 분리 독립에서 재정주권 확립 등으로 다양하다. 반면, 공화좌파당은 한목소리로 분리 독립을 외치고 있고 통합당과는 다르게 정부지출 확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록 통합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앙정부는 당분간 계속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스페인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카탈루냐가 계속 독립을 주장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축소할 경우 스페인의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 수순을 밟고 있는 스코틀랜드

2012년 10월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독립에 대해 묻는 국민투표에 합의하였고,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은 스코틀랜드를 롤 모델로 바라보고 있다. 카탈루냐의 마스 수반은 『라방가르디아』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는 협상을 하는 반면, 스페인 정부는 오로지 협박만





★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주요 지표

구분	2009년 GDP 비중(%)	2011년 1인당 GDP (영국=100)	2011년 인구 (백만명)	2012년 실업률 (8월 기준,%)
스코틀랜드	8	98.7	530	8.2
영국	100	100	6,270	7.9

자료: FT, NYT 등 주요 언론 보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국민성과 민족이 다르며, 영어와 함께 게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843년에 건국된 이후 1707년까지 독립왕국이었다. 1603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같은 군주를 갖게 되었다. 당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개별 독립국으로 동군연합을 구성하였다. 이후 17세기 말부터 합병 논의가 시작되었고, 1707년에 연합법을 통해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양국 의회는 영국의회로 통합되었다.³

18세기에는 스코틀랜드가 미국 식민지 및 잉글랜드와의 관세장벽이 없어지면서 호황을 맞았다. 산업혁명으로 스코틀랜드 경제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스코틀랜드인들은 산업, 정치, 군사 등 주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부론』과 『도덕감정론』 등의 저서를 남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와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모두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자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독립에 대한 지지는 제한적이었다. 1차 대전 이후 스코틀랜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1921년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는 기구인 스

코츠내셔널리그(SNL)가 창설되었고, 1926년에 『스코츠인디펜던트』라는 신문을 만들며 독립운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28년에는 SNL의 지원에 힘입어 스코틀랜드국민당(NPS)이 창설되었고, 1934년에는 권력 이양을 주장하는 스코티시당과 합병하면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탄생하였다. SNP는 1960년 대까지 유럽 대륙에서 반민주주의적 국가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영국이 상당한 힘을 유지하고 있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제국의 탈식민지화가 시작되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자치 이양에 대한 지지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대영제국 아래에서 받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7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며 스코틀랜드의 자신감이 높아졌다. 동시에 SNP의 국회의원 수가 점차 늘어나 1974년에 의석 11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1979년에 스코틀랜드는 독립 의회 설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 51.6%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63.6%로 찬성표가 전체 유권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계획이 무산되었다. 당시 SNP는 국민의 투표권 포기를 권력 이양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집권당이던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는 불신임 투표로 이어져 영국에서는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고, 1979년에 보수당의 승리로 마가렛 대처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보수당은 노동당보다 더욱 강력하게 스코틀랜드로의 권력이양과 독립 요구를 반대했다. 나아가 1989년에 보수당 정부가 스코틀랜드에 인두세를 잉글랜드보다 1년 앞서 적용했다. 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1997년에는 노동당이 스코틀랜드 의회 설립을 메니페스토에 포함시키며 집권에 성공하였다. 같은 해 스코틀랜드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는 “스

코틀랜드 의회 설립에 찬성한다.”에 74.3%, “스코틀랜드 의회의 세율 변경 권한을 갖는 데 찬성한다.”에 63.5%의 표가 몰렸다. 이후 영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292년 만에 부활했다. 스코틀랜드는 이로 인해 복지정책과 소득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99년 스코틀랜드 총선에서는 총 129석 중 56석을 확보한 노동당에 이어 SNP가 35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이는 1974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으로 SNP의 영향력 확대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3년에는 소수당이 두각을 보이며 노동당과 SNP의 의석 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7년에는 SNP가 47석을 확보하며 1표차로 제1당이 되었다. 당시 SNP는 2010년까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소수여당 정부였던 SNP는 집권 이후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연기했고, 2011년 총선에서 69석을 확보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며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2011년 스코틀랜드의 살몬드 수반은 2014년 또는 2015년에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스코틀랜드 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 진행에 대한 권한 여부를 두고 마찰이 불거졌다. 약 1년 동안 스코틀랜드 정부는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였고, 결국 2012년 10월 영국의 카메론 총리와 스코틀랜드의 살몬드 수반은 2014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한다는 내용의 「에딘버러협정」에 서명하였다. 카메론 총리는 서명 이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영국이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스코틀랜드 국민도 자치권 확대를 지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독립을 지지하는 비중은 약 25~33% 사이로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12년 초에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2%가

독립을 지지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는 안보 및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 그리고 북해의 오일펀드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주장하며 비교적 이성적으로 자치권 확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핵무기 관련 전략, 더 구체적으로는 스코틀랜드 파스레인 해군 기지에 있는 핵잠수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독립할 경우 핵잠수함이 다른 기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벨기에의 플랑드르에 비해 경제력이 다소 약하다. 두 지역과 달리 스코틀랜드는 오히려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어 독립 투표를 하더라도 반대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EU는 회원국 내 분리주의 움직임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EU 회원국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회원국에서 분리되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을 외치는 지방정부들은 EU의 자동 가입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회원국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을 EU의 권력 강화로 해석할 수 있어 EU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분리주의 확산에 따른 국가 분열이 회원국들의 긴축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분리된 독립 국가는 EU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가입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정위기와 함께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 EU 회원국들에서 분리주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정위기로 노출된 중앙정부의 취약점을 이용해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 선거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독립 선거를 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방정부가 실제로 독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거 결과

³ 이후 1801년에 아일랜드 왕국과 합병하며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성립되었다.





가 어떻게 나오든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요구는 지속될 것이며 중기적으로 이는 EU 회원국 내 불안요소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재정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가 성장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찾아나가

는 것이 회원국들이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다. 따라서 각국의 리더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EU

The EU to impose anti-dumping tariffs on Chinese solar panels

On November 8th, the European Commission began an investigation into imports of solar panels and key components from China. This was in the wake of industry lobby group EU ProSun charging Beijing of giving its companies unfair subsidies that allegedly reduced the price of their products to 60-90% and calling for the imposition of compensating duties. The Commission took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solar panel production of those firms on the petition exceeds 25% of the entire production in Europe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firms against the petition is less than that level. This is a crucial factor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this kind of investigation gets launched at all. This is also a fundamental aspect to consider in understanding the European Union itself.

EU 관련 업계가 상계관세 조치를 청원

EU집행위는 지난 11월 8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관련 핵심 부품에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¹ 태양광 패널의 정확한 명칭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이며, 관련 핵심부품은 태양광 전지, 태양광 웨이퍼다. 이러한 EU집행위의 결정은 EU 역내 관련 업계의 청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EU의 태양광 산업협회인 EU ProSun²은 9월 26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어 60~90%가량 저가로 판매되어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관세 조치를 청원하였다.³

EU집행위는 청원자들의 동종제품 생산량이 EU 전체 생산의 25%를 상회하고, 동 청원에 반대하는 기업도 있으나, 반대하는 기업의 생산량이 청원을 지지하는 기업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아래에서 언급할 'EU의 이해'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EU집행위는 9월 6일에도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EU ProSun의 청원

(7월 25일)에 따라 반덤핑관세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⁴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웨이퍼를 전지로 변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지를 조립하면 하나의 모듈, 즉 패널을 이룬다. 태양광 관련 업체 중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이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다루는 기업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패널뿐만 아니라 전지와 웨이퍼도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기업은 60~70개에 달한다.

태양광 산업의 최근 동향⁵

EU의 태양광 시장은 미국의 약 10배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28Gw에 달하는데, 이 중 EU가 22Gw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패널의 약 6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패널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⁶ EU의 중국산 패널 수입은 2009년 3.7Gw에서 2011년 17.6Gw로 크게 증가해 2009년 EU 시장 내 중

¹ European Union (2012. 11. 8.). *Official Journal*, 2012/C 340/06.

² 청원자인 EU ProSun은 태양광 패널과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유럽의 20개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http://www.prosun.org>>

³ European Commission (2012. 9. 6). EU initiates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solar panel imports from China, MEMO/12/647.

⁴ European Union (2012. 9. 6.). *Official Journal*, 2012/C 269/04.

⁵ 이하의 내용은 조사 청원자인 EU ProSun에서 제공한 Fact Sheet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청원자에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작성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⁶ 중국의 2011년 태양광 패널 생산은 45Gw이나, 내수는 2Gw에 그치고 있다.





국산 패널의 점유율은 63%였으나, 2011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2011년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214억 유로에 달한다.

중국은 2010년 10월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스마트 그리드, 첨단장비제조,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7개 분야를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은 2012년 9월 12일 태양광 산업에 25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⁷ EU의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단가는 2008년 3유로/Wp였으나, 5개년 계획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아 현재 0.4유로/Wp 이하로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5개년 계획 목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생산비를 0.87유로/Wp까지로 제한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현재 생산 비용은 상당부분이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EU에서도 태양광 모듈 평균가격은 5년 전에 비해 60% 정도로 낮아졌다.

실제로 서구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제조사들은 부채 비중이 매우 높고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으나 꾸준히 증산하고 있다. 이미 많은 대형 기업들이 파산 상태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 EU 업계의 주장이다.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 낙관적인 투자자들과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⁸

기존의 과잉 경쟁과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업계의 급속한 증산으로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독일의 Z-Cells는 지난 4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미국의 Abound Solar도 6월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국에서는 국내 2위, 세계 5위의 폴리실

리콘 업체인 한국실리콘이 11월 2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⁹ 독일의 지멘스는 10월 22일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결정했다. 지멘스는 이탈리아의 아르키메데 솔라 에너지를 인수(4.2억 달러)했고, 2010년에는 이스라엘의 소렐 솔라시스템스를 인수했는데, 태양광 시장의 저성장과 중국 경쟁기업과의 가격경쟁력 열위, 독일정부의 보조금 지원 축소(7월 최대 29%까지 보조금 축소, 2014년부터 연방 및 지방정부 보조금 중단) 등으로 수천만 유로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¹⁰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분석기관인 그린테크 미디어 리서치(Greentech Media Research)는 전 세계 49개 태양광 기업 중 2013년에는 18개만 살아남을 것이며, 이 중 12개 기업이 중국기업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집행위는 반덤핑관세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먼저 개별 기업의 덤핑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상계관세의 경우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EU 산업에 피해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보조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즉, EU의 태양광 산업이 현재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기업의 덤핑과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해야만 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EU집행위는 중국 수출자, EU 생산자, 수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보내온 자료를 취합하여 검증하고 현장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조사 개시로부터 9개월 내에 잠정 결과를 발표해야 하므로 2013년 8월 5일 이전

에는 잠정 결과가 발표될 것이며, 동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둘째, 잠정 상계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최종 판정까지 조사를 지속하거나, 마지막으로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EU집행위의 결정에 따른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제안함으로써 확정되는데, 이사회는 조사 개시로부터 13개월 내에 확정 조치 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확정 조치는 2013년 12월 5일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비록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더라도, EU의 이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즉, EU집행위가 덤핑과 피해 판정을 할 수 있지만, 조치의 이행이 전체 EU의 이해에 반한다면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EU 기업이나, 중국에 폴리실리콘과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관세부과가 양자 간의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¹¹ 현재 EU는 중국에 대해 10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계관세 조치는 1건에 그치고 있다. 4건의 상계관세 절차를 개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1건¹²에 그친 것은 EU의 최종 조치 발동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청원자가 위에서 언급한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청원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원 철회 시 EU집행위

는 조사를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EU ProSun의 입장을 고려하면, 청원을 철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만약 EU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한다면, 이는 상계관세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대상 제품은 중국의 대EU 수출의 약 60%에 달해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확대되는 통상 갈등과 미국, 인도의 대중국 제재

중국은 EU의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가 발동될 경우 양자 간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업체들도 EU의 조사 결정이 근거가 희박하고 산업 전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제한하는 것은 양측의 산업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기업들은 규모의 경제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반박하고, EU의 조치로 인해 태양력 발전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에너지 산업 발전을 저해해 약 15년가량 산업이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¹³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는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EU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보조금이라며 WTO에 제소했다.(아래 표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조치”(DS452, 2012.11) 사건 참조) 과거 중국의 대EU 및 대미국 통상마찰 사례를 보면, 중국은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타 분야로까지 확산된 적도 있다. 중국정부는 11월 9일 EU산 철강에 대해 9.2~14.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11월 30일에는

¹¹ 현재 중국에 부과 중인 상계관세 조사 당시 EU 인쇄업에 대한 이해를 검토했으나,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독일 메르켈 총리는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갈등이 협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¹² 유럽고급지산업협회(the Confederation of European Fine Paper Industries (CEPIFINE))는 중국산 코팅지에 대해 보조금,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조치를 청원하였고, EU집행위는 2010년 2월 17일, 4월 18일 각각 반덤핑관세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EU는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나, 잠정 상계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 이를 뒤집어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5월 4~12%에 이르는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8~3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¹³ China hits at EU solar panel dumping probe. (2012, 9. 6.). *Financial Times*.

⁷ China Releases 12th Five-Year Plan for Solar Power Development. (2012.9.19.). *China Briefing*.

⁸ Despite Troubles, China's LDK Solar to Keep Humming. (2012, 11. 6.). *Wall Street Journal*.

⁹ 태양광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끝 세계 5위마저 잃어지다. (2012, 11. 29.). *Invest Chosun*.

¹⁰ “독일 지멘스, 돈 안 되는 태양광 사업서 철수”. (2012, 10. 23.). 『이데일리』.





EU집행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제시

The EU commission announces a plan to foster its manufacturing industry

In order for the crisis-stricken EU to revive its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trengthening their manufacturing sector is an imperative and to do so requires increas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Unless renewed efforts, for instance investing in new technology, are put in, the EU's manufacturing industry faces the grim prospect of losing out to its main rivals such as the U.S, Japan and Korea as well as emerging economies including China and India. In light of this, on October 10th, the European Commission came up with a new industrial policy proposal addressing the above-mentioned issue: the idea is to strengthen the EU'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reverse the prolonged decline of manufacturing sector so that the manufacturing sector in 2020 reaches up to 20% of the EU GDP.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the European Commission demands that countries reinforce their commitments on investing in innovation as well as improving the access to capital markets.

제조업은 EU GDP의 16%를 차지

제조업은 EU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제조업은 EU 전체 GDP의 17.1%를 차지하였고, 약 2,200만 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2011년 현재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EU의 제조업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와 발전(發電) 및 건설 등에 사용되는 폭넓은 생산요소까지 감안할 경우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까지 상승한다. 더 나아가 제조업에 의존하는 기타 서비스산업(운송, 통신, 금융서비스, 부동산 등)까지 포함할 경우 서비스제조경제(servo-industrial economy)¹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는 47%로 상승하게 된다.

EU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

그런데 EU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EU가 지속 성장과 고부가 고용 창출, 사회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전 세계 공산품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10년에 17.3%에서 16%로 하락하였다. 하지

¹ 제조업에 의존하거나 제조업이 의존하는 시장서비스를 포함한다.

만 EU 회원국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래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은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등은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EU의 1, 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독일은 수출 지향적인 경향이 강해 수출이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전기제품, 화학제품, 기계, 통신기술 등이다. 독일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지역 혁신네트워크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로 인해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부 제조공정이 해외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정과 산업을 국내에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2011년 무역수지를 보면, 독일은 1,580억 유로의 흑자를 보인 반면, 프랑스는 700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EU의 전체 수출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의 EU 내 수출 비중은 2000년 14.7%에서 2011년 10.7%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프랑스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1990년 6.3%에서 2011년 3.3%로 하락하였다. 이렇다보니 지난 10년간 프

★ 최근 CDS 프리미엄 및 국가 신용등급

구분	사건(사건 번호, 일자)	비고
EU의 대중국 제소	히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수출에 관한 조치(DS432, 2012.3)	미국, 멕시코 공동 제소
	EU산 엑스레이 검색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DS425, 2011.7)	
	철강 및 금속 패스너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조치(DS407, 2010.5)	
	원료 수출에 대한 조치(DS395, 2009.6)	미국, 멕시코 공동 제소
중국의 대EU 제소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조치(DS452, 2012.11)	
	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DS405, 2010.2)	
	중국산 철강 및 금속 패스너에 대한 확정 반덤핑 조치(DS397, 2009.7)	

주: CDS 프리미엄은 만기 5년물 기준(bps)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S&P

EU산 화학제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태양광 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은 EU와 중국 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은 2011년 미국 업계의 청원을 받아 조사를 개시하였고, 5월부터 예비판정 결과에 따

라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 10월 상무부가 최종 결정한 반덤핑관세는 15.42 ~ 31.73%에 달하고, 상계관세는 14.78~15.97%에 달한다.¹⁴ 또한, 인도정부도 11월 23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태양광 셀과 기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¹⁵ 따라서 태양광 산업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¹⁶

한편, EU는 한국, 일본, 대만의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에 주시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수출 중 약 50%가 가공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¹⁷ 이는 동 국가들이 중국을 우회하여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수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제3국을 우회한 중국의 불공정 수출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는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가 시작되었다.¹⁸ 따라서 EU의 대중국 무역구제조치를 비롯한 통상마찰에 대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 확대라는 거시적 측면만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전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¹⁴ 미국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지의 2011년 대미국 수출은 31억 달러에 달한다.
¹⁵ China's solar cell producers face tough situation. (2012. 11. 30.). China daily.
¹⁶ 양성진 (2012), "보호주의 굴레에 갇힌 태양광 산업". LG경제연구원.
¹⁷ European Commission (2012, 9.). Facts and figures on EU-China trade.
¹⁸ EU집행위는 중국산 자전거의 상계관세 조사 (2012.4.27 개시)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튀니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European Union (2012, 11, 14.). Official Journal 2012/C 346/07.)



★ EU 전체 수출 중 회원국의 비중 추이

구분	2006년	2011년
독일	25.6	26.5
프랑스	11.0	10.1
네덜란드	9.0	9.5
이탈리아	9.4	9.0
영국	10.1	8.2
벨기에	5.9	5.8
스페인	5.0	5.3
폴란드	2.6	3.3
스웨덴	3.4	3.3
오스트리아	3.0	3.0
체코	1.9	2.4
아일랜드	2.3	2.0
기타	10.8	11.0

자료: Eurostat

랑스의 제조업 분야에서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회원국들의 경쟁력 차이가 커지는 추세

EU집행위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²에서 EU 회원국들의 제조업 성과를 토대로 EU 각국을 5개 분야³에 걸쳐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의 국가들은 ‘일관된 성과(consistent performers)’를 보이는 국가들로, 첨단기술로 무장한 기업과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한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이다. 여기에는 독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그룹은 ‘불균등한 성과(uneven performers)’를 내는 국가들로, 일부 분야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평균보다 저조한 성과를 내는 국가들이다. 이 그룹에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스페

★ EU 국가들의 실질실효환율과 제조업 무역수지 추이 (1998~2008년)

구분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하락	유지	상승
제조업 무역수지	개선	-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유지	폴란드	핀란드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악화	슬로바키아 스웨덴	프랑스 슬로베니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2). The Cost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dustry in the globalisation era – Empirical evidence on the basis of relative unit labour costs(ULC) at sectoral level.

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등이 속해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추격자(catching-up) 그룹’으로, 취약한 혁신능력과 미흡한 기술이전이 혁신 및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속해 있다.

이렇게 EU 국가들의 성과가 다른 이유는 EU 회원국들의 원가경쟁력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⁴ 1998~2008년에 EU 회원국들의 단위당노동비용(unit labour cost)에 근거한 실질실효환율(REER)⁵과 무역수지를 분석해보면,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10년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의

⁴ 무역수지는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 상대적인 내수 증가율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무역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⁵ 실질실효환율은 물가수준까지 감안해서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대외가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해볼 수 있는 지표다. 지수가 상승하면 원가경쟁력이 상대국에 비해 악화된 것을, 지수가 하락하면 원가경쟁력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여 원가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제조업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U 제조업의 기회와 도전

값싼 노동력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유럽에 대한 투자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부 산업 지역의 임금이 매년 20% 가량 상승함에 따라 제조거점으로서 매력에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생산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물류비, 수입관세, 공장부지 임대료, 기타 비용을 감안했을 때 중국 내 생산의 이점이 과거보다 덜 중요해졌다. 중국도 생산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겠지만 중국이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던 저임금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와 관련한 리스크와 비용이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 진출 유럽기업들이 유럽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EU 산업계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산업의 원가구조가 변함에 따라 향후 원가경쟁력이 산업입지의 핵심 결정요인이 될 것이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원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신흥국 경제는 보다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저임금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유럽은 자동차, 항공, 엔지니어링, 화학, 제약 등과 같은 주요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EU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R&D투자의 80%를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다. 신흥국들의 도전에 EU 산업계가 충분히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EU집행위가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EU가 경제성장과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신기

술 투자 등 새로운 노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EU의 제조업은 미, 일, 한국 등 기존의 경쟁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점차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월 10일에 EU집행위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⁶ EU의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제조업 약화 현상을 되돌림으로써 2020년 제조업의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EU GDP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EU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 혁신을 위한 투자다. 첫 단계 조치로서 산업계 및 회원국 정부와 협력하여 단기과제로 녹색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제조기술⁷, 핵심 소재기술, 바이오제품, 건설 및 신소재, 청정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6개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실무팀(T/F)을 구성하여 2012년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둘째는 역내시장과 해외시장 접근 강화다. EU집행위는 조기성고가 기대되는 몇몇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품의 역내시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역내시장의 절반가량은 회원국 차원의 기술규격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기술표준을 확대함으로써 EU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2016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시장에 기업가정신을 불어넣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75% 이상이 전통 산업에서 나온다. 따라서 모든 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야심찬 행동계획을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

⁶ 2010년에 EU집행위는 ‘Europe 2020’의 일환으로 ‘글로벌시대의 통합된 산업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EU의 중기 산업정책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및 자원효율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이 경제침체로 고전하고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중기 산업정책을 급히 재검토하게 되었다.

⁷ 예를 들어, 전 세계 녹색제품 시장 규모는 2007년 약 3,800억 유로에서 2020년에 7,650억 유로로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유럽이 최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기기분리장치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EU차원의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거래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것이며, 2013년 설립 예정인 지적재산권 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동안 수출이 EU 경제의 가장 활발한 성장요소였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13%에서 2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말 이전 까지 알루미늄과 석유정제산업에 대한 EU 규정의 적합성을 개선하고, 원자재 확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에 신제품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모로코, 튀니지 등 주변국들과의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는 금융 및 자본 시장 접근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금을 100억 유로 증액하고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캐피털 기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제거하여 민간기금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중소기업들의 범유럽 경영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넷째, 산업계의 기술 수요를 예측하고 미스매치를 파악하여 새로운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EU집행위는 유럽산업기술위원회(European Sector Skills Councils)와 지식 및 산업기술연맹(Knowledge and Sectors Skills Alliances)을 신설하여 기업, 노동자,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계 역할이 새로운 산업정책의 성패를 좌우

EU는 새로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제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적시 투자와 기회 포착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당국과 산업계가 협력을 강화해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EU집행위는 새로운 청정

기술의 신속한 채택과 산업 내 전파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로드맵과 목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EU집행위는 아래와 같은 핵심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EU집행위의 집중 관리지표

구분	세부 지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 21.25%(2007년) → 18.6%(2011년) -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2015년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0년까지 평균 23%로 확대 - 설비투자는 현재 GDP 대비 6~7% 수준이나,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 2020년까지 9% 이상으로 확대
역내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상품무역은 GDP의 21% 미만으로, 역내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 비중을 2020년에 25%로 확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2015년까지 33%로 확대 • EU 역외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현재 13%에 불과하나 25%가 되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시장에서 수출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2009년 25%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2),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industry back to Europe

EU가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EU집행위와 회원국 정부는 물론 산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EU의 근로관계법 체계

Labour related laws in the EU

Europe's economy is still reeling while analysts are giving different forecasts on the future of the Eurozone crisis. As a result of a fall in asset values in European countries, Chinese and Japanese investors are very active to put their money on Europe. Besides, the atmosphere in Korea is such that allocating more investment on European countries is encourage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particular possess excellent investment conditions such as relatively cheaper wages and qualified labour forces. However, there are abundant cases of Korean companies who are planning to invest in these countries often having problems in understanding about the local labour laws and the local customs of the labour practices. Inquiries related to those issues are being frequently received by experts and the companies would need to look into EU labour laws which could be comprehensively applicable to many cases.

대EU 투자와 근로관계법 이해의 필요성

유럽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의 자산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럽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M&A 등을 통한 대유럽 투자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나 현지의 국내 업체들은 유로존 국가들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에게도 관련 문의가 많은 편인데, 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EU법이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 관련 EU법 규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리스본 조약과 근로 장전

(1) 유럽 내 근로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서 EU 조약과 EU기능조약 이외에 근로관계의 특유한 역사를 가진 유럽을 배경으로 제정된 유럽사회장전(European Social Charter), EU 근로자의 사회기본권 장전(Community Charter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 유럽인권협약(ECH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들 수 있다.

(2) EU기능조약 151조에서 EU와 회원국들은 1961

년 유럽사회장전과 1989년 근로자의 사회기본권 장전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할 여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53조에서는 EU가 여러 분야에서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환경의 증진, 근로조건, 사회보장 및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등 대상 분야들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152조에서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파트너의 역할과 대화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EU의 의무를 천명하고, 156조에서는 위원회가 회원국들 사이에 협조와 조정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람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남녀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도 근로 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EU 기본권 장전 12조 1항은 평화로운 결사자유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4장에서 연대(solidarity)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4) 유럽인권협약(ECH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서는 근로자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직업을 선택해 일할 자유, 직장에서의 사생활 보호¹, 직장 내에서 의사표명의 자유,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¹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EU사법재판소는 전 화도청, 근로자의 인식 없는 업무 중 전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의 모니터링이 금지되고, 이런 자료는 소송에서도 제시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EU 2차적 규범(EU 지침)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EU의 2차적 규범 형태로 중요한 것은 EU 지침이다. 지침은 EU가 달성해야 할 결과에 관하여만 회원국들을 구속하고, 실시 형태나 수단에 관해서는 국내 기관들의 권한으로 남겨놓는 규범으로서,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가장 적당한 입법방식을 정하여 전환할 수 있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행정적인 지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근로 관련 지침들의 주된 내용은 고용보호에 관한 것인데, 중요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ontracts of Employment Directive (91/533/EEC)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초 근무일부터 8주 이내에 중요한 근로조건이 설명된 서류를 교부해야 하고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별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이나 협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관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f Employees Directive(2001/14/EC)

아래 설명한 'EU 규모의 사업체' 라든가 'EU 주식회사(SE)'²가 아닌 EU 국가에서의 일반 사업체 또는 단체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정보접근 및 협의권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체는 최소한 50명, 단체는 최소한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3조).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최근 또는 향후 예상되는 사업체 등의 활동 및 경제상황, 사업체의 고용 상황 및 구조, 비전, 고려 중인 고용 침체 조치, 작업조직 내지 고용계약관계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결

정들이고, 이러한 정보들은 근로자 대표가 검토하거나 협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공해야 한다(4조). 다만 회원국들은 회사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절차를 둘 수는 있다(6조). 그 외에도 근로자 대표의 보호, 지침준수의무, 국내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European Works Council Directive (2009/38/EC)

최초의 지침은 마스트리히트 사회장정 규정에 따른 94/45/EC 지침이었는데, 2009/38/EC 지침으로 개정되었다. 이 지침의 주된 내용은 EU 규모의 사업체 또는 사업체 단체에는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노사 동등의 유럽노동이사회(European Works Council)를 설립한다는 것이다(4조). 'EU 규모의 사업체'란 회원국 내에서 적어도 1,000명을 고용하되 최소한 2개국에서 1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근로자 수는 종전 2년간 계산된 것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포함한다(2조). 그 외에도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금지의무 및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범위(8조), 근로자 대표의 역할과 보호조항(10조)이 있다.

(4) European Company Directive (2001/86/EC)

각국의 회사들이 EU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SE로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근로자 정보제공 및 협의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지침이다. SE의 특성을 반영한 일부 조항 이외에는 대체로 위 European Works Council Directive와 내용이 유사하다.

(5) Working Time Directive(2003/88/EC)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침은 다음의 6가지에 초점을 맞춰 규정하고 있다.

- i) 하루에 11시간 연속 휴식(3조)
- ii) 최소한 6시간에 한 번은 휴식시간 제공(4조)
- iii) 3조의 하루당 휴식시간 제한에 더하여 1주당 최소한 24시간의 연속된 휴식(5조)
- iv)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하여 평균 근무 1주 당 최대

48시간 근로 제한(6조)

v) 연간 최소 4주의 유급휴가(7조). 최소한의 유급휴가는 휴가 대신 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

vi) 야간근무는 1일당 평균 8시간 초과금지(8조). 야간근로자는 근무 전 및 정기적으로 무상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건강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주간근로로 교체하여야 한다(9조).

이 외에도 다른 규정들을 두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여러 유형의 직장이나 분야(가내근로자, 경비근로자, 병원 및 긴급서비스 종사자, 농업 및 관광 종사자 등)에서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등한 기간의 보상적 휴식기간이 제공되거나,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7조). 또한 위 3, 5, 6, 8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더 낮은 수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시간의 보상적 휴식기간 내지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18조). 주간 근무시간 제한과 관련된 6조의 경우 회원국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원칙을 준수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2조).

사법재판소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매우 제한된 재량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예외규정이 없는 연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도 면제될 수 없다는 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³ 또한 회원국들은 지침에서 규정한 여러 개념들(예를 들어 근무시간, 보상적 휴식)을 포함하여 조건 또는 제한을 부가하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⁴

(6) Young Workers Directive(94/33/EC)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나이에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15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대

하여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

(7) Parental Leave Directive(2010/18/EU)

유럽 차원의 4개 노사단체들⁵이 협상한 결과 새롭게 마련된 지침이다. 양육휴가는 자녀가 8세까지 최소 4개월이고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된다(부속합의서 2조). 양육휴가를 마치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부속합의서 5조). 양육휴가 지침은 전일근무, 부분근무, 기간을 정한 계약, 일시적 파견관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8) Part-time Workers Directive(97/81/EC)

유럽 차원 3개 노사단체들이⁶ 정한 파트타임 근무 관련 합의를 EU 차원에서 집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와 파트타임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⁷ 예를 들면, 전일근무에서 파트타임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될 수 없다(부속합의서 5조 2항). 회원국들은 노사 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부속합의서 2조). 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행정관행이나 법률에 의하여 파트타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전일근로자와의 비차별 원칙은 보수뿐 아니라 고용관계와 관련 있는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9) Fixed-term Workers Directive(99/70/EC)

유럽 차원 3개 노사단체들의 기간제 근로에 대한 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² EU 주식회사는 EU 전체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고 EC 규칙 2175/2001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통일적 형태의 회사이다.

³ C-173/99 BECTU, C-342/01 Merino Gomez 등 판결

⁴ 대기시간(on-call)과 관련하여 간호사, 교사, 의사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C-10/04 Dellas and Others 등 판결들이 많다.

⁵ BUSINESS EUROPE(총련의 UNICE), CEEP, ERUC, UEAPME

⁶ UNICE, CEEP, ETUC

⁷ 유럽 노동시장은 수십 년간 정규직 고용보장 강화와 함께 파트타임 등 일시적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어왔고, 2개의 노동시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Employment in Europe. p.151.)





자 사이의 차별금지와 사업주의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가 목적이다(부속합의서 4, 5조). 사업장 내 정규직의 추가 필요인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부속합의서 6조). 사법재판소는 비차별 합의가 보수문 제에도 적용되므로, 국내 법률상 정규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⁸

(10) Agency Workers Directive(2008/104/EC)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파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으로(2조),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 직접 고용 된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게 하는 것이다(5조). 동 등한 대우를 받을 영역은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휴 식, 휴가, 야간근무, 명절 등 공휴일, 임금이고, 그 외에 도 임신근로자 및 수유근로자, 미성년근로자의 보호, 남 녀차별, 국적, 종교, 장애, 나이 등을 포함한다(3, 5조).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장 내 추가 채용 기회에 대한 정 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 시설이나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6조), 근로자 대표를 가질 단체권리도 있다(7, 8조). 한편, 회원국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서, 여러 면제 내지 선택 조항을 두고 있다(1, 5조).

(11) Posted Workers Directive(96/71/EC)
본사와 해외지사 근무자 간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는 무관하게 해외지사 근무자의 근로시간, 연가, 최저임금, 건강 안전, 동등대우 등에 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국의 법률 등을 적용해야 한다(3조).

(12) Acquired Rights Directive(2001/23/EC)
회사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수도(이전)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으로, 77/187/EC 지침을 수정한 것이다. 양수자와 근로자 사

이에는 고용계약의 종결, 불리한 중요변경 등이 금지되 고 그 이전에 합의한 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 할 수 있다. 회원국법과 부분적인 조화를 이루어 별도의 EU 기준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기존의 국내 근로보호 법에 따라 보호된다.

사법재판소는 ‘양도되는 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사업체나 사업의 유형, 이전되는 무형 자산의 가치, 양도전후의 활동 사이의 유사성 정도, 활동이 정지되었 던 기간, 경제적 활동의 안정성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 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⁹, 이러한 판단은 국내법원의 사실 확정 문제로 남는다.

책임 있는 ‘양수자’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되겠지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우 같은 그룹 내 ‘경영회사 (personnel company)’가 아니라 영속적인 성격을 가 지고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는 ‘영업회사(operating company)’가 의무를 진다.¹⁰ 회원국들은 양도인과 양 수인이 합동으로 또는 각자 기존 고용계약 또는 계약관 계의 의무들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3조 1 항).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 조항의 위반은 아니다.¹¹ 근로자 측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이유(이른바 ‘ETO’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데(4조 1항), 일반적으로 사법재판소나 국내법원에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13) Collective Redundancies Directive (98/59/EC)
집단인원정리(collective redundancies)란 사업주 가 잉여근로자들이 있는 경우 근로자 자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다수의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지침에 해당하는 잉여인력 수의 계산방식은 지침 제 시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1조). 이 지침은 인원정리를

피할 방법,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를 줄일 방법, 그들 의 피해를 줄일 방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협 의를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의무, 전문가의 조사 요청권 (2조 1, 2항), 사업주의 관찰관청에 대한 정보보고의무 (2조 3항)에 관한 규정이 있다. 사법재판소는 인원정리 결정을 실제 고용주 또는 그 지배회사가 했는지는 상관 없이 실제 고용주에게 지침 의무가 있으며, 모회사의 결 정은 실제 인원정리가 이루어지는 자회사 내에서 협의 절차가 종결되어야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였다.¹²

(14) Insolvency Directive(2008/94/EC)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지침인데, 종전의 80/987/EEC 지침을 대체한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회원국이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 재원을 설치하게 하고 있다(3조). 회원국들은 일정한 범 위에서 보증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보 증한도가 정해져 있고, 동등한 정도의 다른 보증제도가 있는 특정한 영역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1, 4조).

(15) Employment(illegal migrant) Directive (2009/52/EC)
불법 체류하는 제3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징 별과 조치를 규정하는 지침이다. 사업주는 제3국민의 근로 희망자들이 체류허가를 얻었는지 검사한 후 관련 서류 복사본과 함께 조사기록을 보관하는 한편, 당국 에 이를 통지할 책임을 부담한다(4조).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벌금, 사업장 폐 쇄, 인허가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불법체류 자의 반환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5, 6, 7조). 불법고용 사업주가 도급관계의 수급인인 경우나 도급인이 국내 법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급인 과 공동으로, 또는 각자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 다(8조). 회원국들이 고의로 불법 고용한 경우에 반복 적으로 위반하거나, 다수 고용, 노동력 착취, 미성년자 고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적용해야 하 며 경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9 내지 12조). ★

조용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⁸ C-307/05 Del Cerro Alonso

⁹ C-13/95 Ayse Süzen, C-48/94 Rygaard v Dansk Arbejdsgiverforening
¹⁰ C-242/09 Albrón Catering BV v FNV Bondgenoten and John Roest
¹¹ C-386/09 Jhonny Briot v Randstad Interim and Sodexo SA

¹² C-188/03 Junk





하나의 유럽: 유럽 공동정체성과 문화다양성

One Europe: common European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European solidarity and unity are needed more than ever at this point in time. A good chorus becomes a great piece of music when the melody accompanied by main theme is consistently being harmonised with other choirs of voices. The same would be applied to the creation of common European identity. With the birth of democracy and the glorious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capitalism as a priceless foundation, is it not the case that ‘One true Europe/European’ will finally be forged when each member state and regional diversity, rather than standing out from one another, work towards creating harmony?

Ode to Joy, Symphony No. 9 ‘Choral’ (Beethoven) : 유럽의 노래

매년 연말이 되면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한다. 이 곡은 베토벤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탄생했다. EU의 국가인 이 곡이 1824년 빈에서 초연되었을 때 지휘봉을 잡은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 관객의 기립박수를 듣지 못했다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이 곡은 유럽통합의 역사처럼 운명에 맞서듯이 대담하게 펼쳐지는 1악장으로 시작해 독일 시인 프레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 An Die Freude(Ode to Joy)’에 곡을 붙인 4악장으로 마무리된다. 4악장은 교향곡에 최초로 성악을 결합한 것으로, 실러의 시구가 전하는 기쁨과 구원, 형제애와 인류애가 장엄한 멜로디를 통해 듣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합창〉은 EU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노래다. 1972년 유럽의회가 자유, 평화, 연대의 이상을 노래한 이 곡을 유럽국가로 선정하였고, 1985년에는 EU 정상회의에서 EU 공식 국가로 채택되었다. 전 인류가 형제가 되는 실러의 이상적 가치를 베토벤이 공유하면서 진한 감동을 만들어냈듯이 유럽공동의 정체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유럽통합의 지지자들은 이 곡을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의 노래로 선택한 것이다. 이 곡은 각 회원국의 국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회원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통합을 기념하기 위한 곡이다. 그래서 〈합창〉은 그 탄생에

서부터 곡이 갖는 의미가 그러하듯 유럽통합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하다.

유럽통합과 유럽 공동정체성

EU가 2012년 유럽통합의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지만 유럽은 20세기 전까지 영토분쟁, 신·구교 간의 갈등, 각국의 이해가 걸린 왕권상속, 해외식민지 분쟁 등으로 갈등과 전쟁이 점철된 역사를 지나왔다. 더욱이 20세기 참담한 1,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국지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과거 유럽 국가들의 헤게모니 다툼은 결과적으로 유럽의 역사에 안정과 평화를 주기보다는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만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의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유럽공동체가 태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EU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과 정치, 외교적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통의 문화정체성 없이는 궁극적인 유럽통합이 불가능하다. 서유럽과 동유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슬람 국가들도 포함하게 될 EU의 지속적인 결속과 정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동질성을 보장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Laffan(1996)¹은 정치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¹ Laffan, B. (1996).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Political Order in Europ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4(1).

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의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내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Neumann(1994) 또한 한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정치 행위자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에 걸맞은 정체성을 만들어놓고 이에 관해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의 정체를 고려할 때, EU는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국민의 집합체인 만큼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자발적으로 가지게 되는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Weiler(1999)²가 주장했듯이, 필요할 때마다 인위적으로 유럽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만들어진’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활용하여 ‘통합체 속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 내지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을 고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문화가 가지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 모든 국가가 국민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적 상징물을 사용하듯이, EU 차원에서도 유럽의 국기와 국가, 유럽의 날 등과 같은 상징물을 도입하여 유럽 시민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EU의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유럽통합 과정에서 문화정책을 논의할 때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정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에 ‘유럽공동체는 회원국들의 국가적·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의 문화유산을 중요시하면서 회원국들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정책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채택되는 다양한 문화정책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도

² Weiler, J. H. H. (1999). *The Constitution of Europe: ‘Do the New Clothes Have an Emperor?’ and Other Essays on European 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모토는 하나의 준거로 활용되어 왔다.

유럽공동의 문화정책은 문화통합과 문화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통합은 유럽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이고, 문화다양성은 유럽통합을 추구하며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호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유럽은 이러한 문화정책과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통합된 유럽을 만들고자 한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는 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이른바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국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채택된 이 협약을 통해 ‘각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협약에 의해 모든 국가는 제재나 위협을 받지 않고 명백한 국제규정에 의해 예술과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토와 문화정책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EU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시민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톱다운(top-down) 방식에 의한 충성심 유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욱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통합의 심화를 이끌어가려는 EU의 노력은 최근 재정위기로 불거진 소위 유럽의 남북문제와 서유럽 일부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다.

서유럽 각국 지역의 분리독립에 대한 요구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발발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유럽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EU로부터 벗어나려는 분리주의 세력이 갈수록 득세하고 있다. 분리 요구는 과거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을 타고 분리주의 정



당이 세력을 크게 넓힌 곳만도 5개국에 걸쳐 6곳이나 된다.³

스페인과 벨기에,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유로존 국가 안의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에 존재하던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리 요구의 바탕에는 물론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자리 잡고 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가난한 지역에 더 이상 자신들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유럽 내 남북문제, 이른바 재정 위기의 주인공인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를 왜 북유럽 국가들이 계속 분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부유층 자산 비율이 순채권국의 부유층 자산 비율보다 여전히 높은데도 그들의 부채를 국내 부유층의 양보와 노력 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지나치게 분담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데서 비롯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EU가 추구하는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결속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플랑드르 독립과 벨기에의 연방화를 주장해온 새 플랑드르연대(NVA)가 승리했다. 벨기에에는 서유럽에서 지역적·민족적 갈등이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총인구 1,100만 명 중 약 58%를 차지하는 부유한 플랑드르계(네덜란드계)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약 31%의 왈로니아계(프랑스계) 간의 경제적·정치적 격차가 커서 지난 2010년 총선 이후에는 500일이 넘게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상관리 내각체제가 운영되기도 했다.

벨기에에 이어 지역 분리독립 움직임이 가장 강한 곳은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이다. 인구는 스페인 전체의 16%(730만 명)지만 GDP는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출 비중이 25%나 된다. 이렇게 스페인 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연간 지역내총생산(GRDP)의 8.5%(약 170억 유로)가량이 중앙정부를 통해 남부 안달루시아 등 가난한 지방정부를 돕는 데 사용돼 이 지역 주민의 불만이 크다. 이런 가운데 카탈루냐 지방정부도 경제위기로 부채가 많아지자 지나친 과세부담을 거부하며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어 지난 11월 25일 치러진 스페인의 주의회 선거에서는 스페인 카탈루냐 주(주도 바르셀로나)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의회를 장악했다.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카탈루냐통합당(CIU)과 이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주의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것이다. CIU의 당수와 그 지지자들은 중앙정부가 세금은 많이 거둬가면서 돌려주는 것은 적어 카탈루냐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페인 주요 일간지 『엘파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분리독립 지지는 46%, 반대는 42%로 나타났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동북지방의 부유한 주다. 천년이 넘는 역사와 고유 언어, 문화를 자랑하는 카탈루냐는 자긍심이 강하다. 파시스트 독재자 프랑코 총통 집권 시 자치권을 빼앗겼으나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되돌려 받았다. 카탈루냐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남부 시칠리아가 지난 7월 중앙정부로부터 4억 유로를 수혈 받은 이후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상업 및 금융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 북부 부유한 산업 도시에서는 남부의 가난한 농업 도시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한다. 전통적 농업지역인 시칠리아 등 남부는 이탈리아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35%를 차지하지만 소득은 북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북부 롬바르디아 주와 남부 칼라브리아 주의 소득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카탈루냐, 이탈리아 북부와는 달리 스코틀랜드는 영국(잉글랜드)보다 경제력에서는 뒤진다. 하지만 최근 스코틀랜드 지방의회는 독립 찬반 국민투표를 2014년에 실시하기로 영국과 합의했다.

서유럽의 일부 지역정부들이 이렇게 분리독립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유럽 재정위기 이외에도 EU의 정책 결정 과정상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있다. 민주성 결핍의 해소라는 취지하에 EU는 회원국 정부를 넘어 각 지역정부와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다. 각 지역정부는 지역발전기금과 구조기금 등의 신청 및 집행에 직접 참여한다. 따라서 각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독립하여 자치권을 인정받더라도 EU에 남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EU로서는 이들 각 지역정부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달갑지만은 않다. 또한 EU 회원국이 되려면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지만 분리가 이뤄진 스페인, 영국 등이 이들의 회원 가입을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성 보존을 강조해왔던 EU로서는 그 범위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사실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건 EU 문화 정책이 과연 유럽인의 공동 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위기와 같은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럽인들은 유럽통합의 선구자들과 문화정책의 입안자들이 바라듯이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지붕 아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유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적 상징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⁴에 2013년에는 포르투갈, 폴란드, 키프로스, 그리스가 불참을 선언했다고 한다.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정위기를 불참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가운데 화려한 무대효과로 가득 찬 유로비전에 참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참가비나 중계권료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 배정하면서 문화정책이 관할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문화정책이 '유럽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굳건한 기대와 믿음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유럽의 연대와 결속이 필요한 시기다. 좋은 합창은 곡의 주요 테마를 이루는 선율을 따라 다른 성부의 선율들이 수평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갈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한다. 유럽의 공동정체성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 태동하여 세계로 확산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각 회원국과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진정한 하나의 유럽, 그리고 유럽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

고주현 연세-SERI EU 센터 연구교수

³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역,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 이탈리아의 북부지방과 영국의 스코틀랜드

⁴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유럽방송연맹에 가입한 유럽 40여개 국가들이 매년 5월 개최하는 음악 콘테스트다. 내년이 58회째로 스웨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럽개혁센터(CER)가 제시하는 경제회복 해법

Economic recovery requires a better deal for labour

Economic recovery in Europe is being held back by the weakness of business investment. Despite a secular rise in corporate profits, investment has fallen steadily for 30 years. This is not the result of waning competitiveness brought on by onerous labour regulation or excessive business taxes, but weak consumption. Businesses will not invest unless they are confident about the outlook for demand. European governments must not weaken the competitive pressures that contribute to productivity growth. But they need to combine supply-side reforms with policies to prevent a further rise in inequality.

최근 영국의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는 유럽경제의 회복이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고민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투자활동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 비중 감소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내수위축을 지목하였다. 이와 함께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정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향상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국민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이 증가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이 감소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와 내수위축은 기업들의 투자 동기를 저하시켰고, 결국 유럽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설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을 한 가지로 지목하기는 쉽지 않다. 기술의 발전, 자본 유동성 확대, 세계화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한다.

유럽의 각국 정부는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경제성장 및 경제활성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정책들이 오히려 유럽경제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역으로 노동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소비세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가 단행한 하르츠 개혁(2004)은 대표적인 노동시장 개혁인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켰다

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기업의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단행된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긴축은 사회이전소득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격차 확대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물론 이러한 정책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로울 수 있지만, 긴축정책과 임금상승 억제는 유럽경제권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현상(Structural shortage of demand)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Supply side reforms)과 함께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재정정책을 완화하고 재정긴축을 마무리하여 내수활성화에 힘쓰는 정부의 역할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급류를 형성하고 있는 위기탈출의 해법은 유럽개혁센터가 제시한 방안과는 상충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긴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회복만이 위기극복의 해법이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IGS 국가들 중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긴축노력을 꾸준히 진

행한 결과 점차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도 그 동안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했음을 인정하면서, 미뤄왔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이 2000년대 초반의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을 거치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7월에 스페인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통과시켰고, 이탈리아도 지난 6월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승인하였다. 더욱이 유럽의 핵심국인 프랑스도 지난 11월에 기업부담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재정지출 감축 등을 포함한 일명 ‘갈루아 보고서’¹를 바탕으로 경제개혁 방안을 마련하며, 보고서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료: Centre For European Reform (2012. 11.), Economic recovery requires a better deal for labour.)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연평균 가계소득 변화율

(단위: %)

구분	전체 인구	소득하위 10%	소득상위 10%
프랑스	1.2	1.6	1.3
독일	0.9	0.1	1.6
이탈리아	0.8	0.2	1.2
영국	2.1	0.9	2.5
캐나다	1.1	0.9	1.6
일본	0.3	-0.5	0.3
미국	0.9	0.1	1.6

주: 연평균 변화율 (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자료: OECD

★ 법인세율의 변화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분	1980	1990	2000	2012
프랑스	50.0	42.0	37.8	34.4
독일	60.0	54.5	52.0	30.2
이탈리아	36.3	46.4	37.0	27.5
영국	52.0	34.0	30.0	24.0
캐나다	50.9	41.5	42.4	26.1
일본	50.0	50.0	40.9	39.5
미국	49.7	38.7	39.3	39.1

자료: OECD, Tax Statistics.

¹ 지난 11월 5일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위원장인 갈루아(L. Gallois)는 ‘산업경쟁력 강화 협약(佛 경쟁력 보고서)’을 제출





제4회 EU Week The 4th EU Week

The Yonsei-SERI EU Centre organised the EU Week event between November 19th and November 23rd. The EU week was composed of Mock EU Summit, EU Debate competition, and EU Essay Contest, inviting interested students on European affairs to participate in academic contests, exchanging new information and ideas between them.

The Mock EU Summit of 2012 was held jointly by four EU Centres of Korea, with the Hufs-HRI EU Centre taking lead. At the Mock Summit final on November 19th held at the Minerva Hall, students debated the positions of their respective EU member states in a European Council setting, according to the institutions procedures.

On November 22nd, the finalists of the essay contested presented on their works in the New Millennium Hall, finalizing the essay contest. The EU debate competition, organised in part by the Yonsei Leadership Centre, held the competition on November 21st and 22nd, where the students discussed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European Union. On the same day, the Awards Ceremony and EU night event was held at Yonsei University Allen Hall.

연세-SERI EU센터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4회 EU Week 행사를 개최했다. EU Week는 EU 모의 유럽이사회, EU 토론대회, 그리고 학생 논문 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과 EU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펼쳤으며, 열띤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에는 한국 외대의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2012 EU 모의 유럽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4개 EU센터(연세-SERI EU센터,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부산대 EU센터, 영남대 EU센터)가 참여하였다. 22일에는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학생논문대회 결선이 열렸으며, 논문 작성자들이 자신이 쓴 글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연세-SERI EU센터와 연세 리더십 센터가 공동 주최한 EU 토론대회가 열렸는데, EU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며 EU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연세대 알렌관에서 EU Week 시상식이 열렸으며, EU Night 축하행사를 끝으로 EU Week를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제16회 브뤼셀 포럼 The 16th Brussels Forum

The 16th Brussels Forum was held on November 23rd, 2012, at Yonsei University Underwood Hall #701. At the Forum, Professor Jean-Francois Hennart from Tilburg University presented on the topic of "The internationalisation of Italian family firms." The forum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family firms are more internationally involved than non-family firms in the case of Italy. Theory on the matter was divided, with some suggesting less internationalisation due to managerial positions occupied by family members lacking international management skills, among others, while others suggesting more internationalisation due to longer term perspectives in family owned firms promoting investment abroad. A final gravity model was developed to better measure the level of internationalisation, the dynamics of which, were explained by Professor Hennart.

지난 11월 23일 제16회 브뤼셀 포럼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홀 701호에서 개최되었다. 틸버그 대학교의 장 프랑수아 헤나 교수는 "이탈리아 가족기업의 국제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탈리아의 가족기업과 일반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강의의 요점이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외투자에 힘쓰는 가족기업을 살펴보는 한편, 가족기업 구성원의 국제 경영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국제화 수준이 낮은 기업 사례도 살펴보았다. 또한 헤나 교수는 국제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도 함께 설명했다.





온라인 원격 강의 Online Remote Lecture

On November 8th, 2012, an online remote lecture on “The EU’s Normative Power: Ten Years on” by Professor Ian Manners took place at Yonhee Hall #404, Yonsei University. This online remote lecture connected Yonsei University, Keio University, Fudan University, and Tsuba University through a video conference. Students were able to attend Prof. Manners’ lecture from four different locations simultaneously. The project was undertaken through the initiative of the Keio EU Centre. In his lecture, Prof. Manners spoke of the post-cold war era, the definition of normative power, the influence of the EU in the next ten years, and th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is. First, he defined normative power to be one of the three principal types of power along with hard and soft power. Then he elaborated the nine areas in which the normative power of the European Union was influential, namely sustainable peace,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rule of law, equality, social solidar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These are the areas in which the European Union is able to lead the debate and persuade or attract other nations to join and follow the EU’s actions. The lecture led to a lively discussion between the students of the four universities and the lecturer.

지난 2012년 11월 8일, 이안 매너 교수는 “EU의 규범적 권력: 10년 후”라는 주제로 연세대 연희관 404호에서 강의를 했다. 온라인 원격 강의 프로젝트는 게이오-EU 센터에서 첫 선을 보인 바 있는데, 이번 매너 교수의 강의는 연세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푸단 대학교, 그리고 츠바 대학교의 학생들이 동시에 시청했다.

매너 교수는 강연에서 탈냉전시대와 규범적 권력의 정의, 그리고 10년 후의 EU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규범적 권력을 경성권력, 연성권력과 함께 권력의 기본 유형 3가지 중 하나로 정의하였으며, EU의 규범적 권력의 영향이 닿는 9개 영역을 지속가능한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평등, 사회결속,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굿 거버넌스로 나누었다. 강연 이후 매너 교수는 4개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